

투데이 칼럼

실수에 대처하는 자세

여러분!
날마다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는 그날도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웬일인지 평소보다 더 분주했던 엄마는 식초병을 참기름병으로 착각하고 찌개에 넣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차 했지만,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까운 마음에 그냥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학생 큰딸이 찌개 맛을 보니 잔뜩 찌푸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찌개 맛이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그러자 초등학생 둘째 딸도 기다렸다는 듯이 언니가 했던 말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쏟아지는 음식 불평에 엄마는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런 두 딸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빠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맛 좀 보자. 조금 시름하긴 하지만, 먹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평소와 하지 않던 실수를 한 것 보니 엄마에게 걱정거리가 있는 듯하

기 고론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해 더욱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행정의 ‘적극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법과 원칙을 따르는 ‘소극적 준수’를 넘어, 군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서 ‘능동적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행정은 종종 절차와 규정의 틀에 갇혀 군민의 기대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적극행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중심 행정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이다.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군민의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고창

최신의 방안을 모색할 때, 비로소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얻는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는 자세가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며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행정은 단순한 ‘관리의 영역’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적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부서나 특정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모든 공직자가 일상 속에서 실현해야 할 자세다. 상급자는 부하직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조직은 실



김 영 식
고창군 부군수

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창군은 소신있게 행정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

며,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보호관 및 소송지원 등을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에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누리집을 통해 군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했을 때는 규제혁파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규정 중심에서 군민 중심으로, 소극적 집행에서 능동적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 적극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것은 공직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책무이다.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군민을 위한 행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제언

아동학대는 결코 특별한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4만 8,522건, 그중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 5,739건에 이릅니다. 이중 가해자의 86%가 부모 등 보호자였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는 것이 마음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에 경찰은 112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이의 안전 울타리가 돼 줘야

두고 출동하며, 필요시 즉각 분리 및 보호와 초기 지원을 시행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심리 치료, 반복 학대 예방, 가해자 조사 등 여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아이가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이는 44명에 달하고, 이 중 53.5%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 방관을 줄이고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선연했습니다. 즉, 국가는 아동의 생명·안전·존엄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일상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민 여러분의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따뜻한 관심이 함께 할 때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아이의 삶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권리를 가진 하나의 시민입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세요. 경찰은 언제나 묵묵히 아이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고대법 부안경찰서 서리지구대 경사

사 설

음주운전 처벌 약하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외국인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캐나다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등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이후 SNS에서는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도 “범인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 말이 안 된다”, “한국은 법이 느슨하니까”라며 넘길 일이 아니다” 등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해마다 40%를 웃도는 만큼,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국내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은 최대 8년에 그친다. 반면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미국의 일부 주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

영치금으로 6억 꿀꺽

전직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이 재구속된지 석 달 만에 영치금으로 6억 5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른바 ‘윤여개인’의 내란 자금출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영치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1일 영치금 사용한 금액이 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모은 금액만으로도 윤석열은 앞으로 89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관련법에 비춰 현행 영치금 제도는 사실상 윤여개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예시: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에 연봉, 월 약 380만 원)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윤석열의 구속 만료까지 70일이 남았다. 6억의 자금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억 572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영치금 중 6억 5166만 원을 180번에 나눠서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 6258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 개념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법 규정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